

2017. 3. 9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이익현 원장, '제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및 도전'서 기조발제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9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및 도전'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조발제를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업법무협회와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익현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한민국 법제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전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제도 정비 방향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발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법 등 민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까지 문제점을 잘 극복해왔다"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대응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정치 경제 리더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와 정부 및 학계 등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 중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존의 법제도가 새로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7. 3. 13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 로열볼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월) 오전 7시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터 15년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제15대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발제에서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소부터 오늘날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의 연혁을 소개하고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입법정책포럼 개최사에서 “오늘 발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는 재판,



전쟁범죄, 인권법과 국내법의 상호작용, 국제형사재판의 연혁과 종류 등 국제형사재판의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처벌, 납북인사와 북한 인권 문제 등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구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2017. 3. 18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과
 공동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서승환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규제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 며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학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2017. 3. 27 세종시 소재 식당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와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2017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법제현안과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 법제이론과 실무정보 교환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향후 조만간 개최하여 법제현안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현안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법제처와 정기적으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 4. 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자리에서 학계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토론이 있었다.



2017. 4. 27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로열볼룸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7일(목) 오후 2시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2016년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을 소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후원했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에티엔롤랑-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발제 주제는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행정심판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이며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전훈 교수, 행정자치부 권영우 사무관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2017. 5. 10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존유 교수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 비교’ 포럼서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수)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존유(John Yoo) UC버클리 로스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 비교-개혁의 기회(Presidential Power in Korea & the United States—Opportunities for Reform)’를 주제로 제2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유 교수는 UC버클리 로스쿨 교수로 2013년부터 UC버클리 한국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장 및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존유 교수는 미국대통령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전달했다.



2017. 5. 11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미얀마 고위 공무원 초청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1일(목)에 미얀마 건설부 공무원 10명을 연구원으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미얀마 도시개발 정책 및 법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은 ‘한국 도시개발법과 미얀마 도시 개발 제도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KOICA 의뢰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얀마 한따와디 공항인근 및 양곤주 남서부 지역 MP수립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7. 5. 2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

교육·소비자 법제 분야 이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 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연구자, 법학자, 실무자 등 전문가가 모여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정책과 입법 및 입법평가’를 주제로 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의 시작말씀으로 학회를 엮었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현행법상 규제 의미와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등 각 세션별로 4개씩, 총 12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 의회 임영덕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진재영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송민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 기본연구계획

01. 신성장분야 규제개선연구(I)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나, 여전히 ICT 융합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별법상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에 장애가 발생하여 상품화·상용화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성장 분야에 적용되는 법제와 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위한 전면적인 규제개선방안을 제시

02.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정부의 직간접적 행정 및 공·사간의 협의 행정 등 행정업무 수행방식이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실정법상의 대행제도에 대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에 관하여 법이론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으므로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I)

종래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각종 집행수단(대집행, 즉시강제,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에의 제한 등)에 대해서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적합한 행정의 집행력 확보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종 제도와 정책수단들에 대해서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무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04.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1)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법령상 과태료 제도의 정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일반국민은 물론 일선 행정 실무차원에서의 법적 불명확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개별 법령상 합리적인 과태료 규모모델의 확립을 통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과태료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제시

05.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적 혁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현장에 데이터 기반 예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시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화 방안을 마련

06.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각 서비스가 운영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인력양성, 전달체계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

07.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유엔 해양법 협약의 체결은 해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해양관련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양의 이용에 대한 경쟁을 자극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해양에서 영위되는 어업, 해상운송, 자원개발, 레저 등의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양에서 증가되는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

08. 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OECD 기타 국제 협정들로부터 추출된 공기업 규율 또는 경쟁중립성 조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행 공기업 정책 및 법제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이들 조항들의 채택 여부가 우리의 경제적 법적 선순환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공기업 관련 정책 및 법제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

09. 영상콘텐츠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연구

방송시장과 영화시장의 영상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성은 관련 부문 종사자들의 창의력과 의욕을 좌절시킴으로써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영상콘텐츠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10. 소비자 품질보증법제 개선방안 연구

오늘날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에 있어서 책임관계의 명확화가 필요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Consumer Warranty or Guarantee)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11.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동일·유사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감독체제로 인한 차별적 제도운동을 개선하고 금융시장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2.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Regulatory Sandbox(규제안전공간)”에 대한 법·제도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규제 전환 가능성 및 규제방식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여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현황과 법제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